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 10. 7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10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노 재



대전광역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6 . 10.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기금의 회계관리 방법을 정함
- 라.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재해대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 '97년 이후 대전광역시의 재정형편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투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 '96년 6월말 현재 시의 기금 조성상황은 20건에 392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기금의 신설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재해대책기금의 신설은 법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불가피성이 있으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재적립 기준은 시의 재정형편과 예년의 재해복구 소요비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11. 15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12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노 재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6 . 12.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도심지내 건축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녹지·주차장·문화공간 등을 법적규정이상 설치 또는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상업지역에서 녹지·주차장·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건폐율을 10
분의 7에서 10분의 8로 상향조정함.

나. 도시계획구역내 중심·일반·유통사업지역 안에서 녹지·주차장·
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
률을 1천퍼센트 내지 1천300퍼센트에서 1천100퍼센트 내지 1
천500퍼센트까지로 상향조정함.

3. 검토 의견

본안건은 도심지내 건축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지·주차장·문화공간 등을 법적 규정이상 설치 또는 조성토록 유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상업지역에서 녹지·주차장·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건폐율은

10분의 7에서 10분의 8로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중심·일반·유통 상업 지역안에서 녹지·주차장·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1천퍼센트 내지 1천300퍼센트에서 1천100퍼센트 내지 1천500퍼센트까지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검토결과, 행정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지·주차장·문화공간 등을 확충, 공공복리를 증진하려함은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기타 시설물 등이

당초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등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